

### 저탄소행 여정 시작한 지구촌

# 수소 생태계 만들고...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늘린다

중 중징, 미래 성장산업에 수소 선정  
인도 델리 NCT, 전기차 지원 확대  
케냐 나이로비시, 기후변화 대응

세계도시들이 뉴노멀 시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산업 구조를 저탄소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 충칭시는 미래 핵심 성장산업으로 수소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으며 인도 델리 NCT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섰다. 케냐 나이로비시에서는 잉여 농산물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취약계층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자원 낭비를 막는 기후 변화 대응 복지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2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중국 충칭시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소산업 클러스터 건설, 수소 연료전지 개발, 수소 충전소 확충을 추진하며 '수소생태계의 메카'로 도약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새해 첫날인 지난 1월 1일 인도 북동부 아삼주 나가온 지구에 있는 한 사원을 찾은 신도들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신화통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3060목표' 행동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의 경제계획을 제시한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전략적 신성장산업으로 신에너지 산업을 꼽으면서 수소에너지를 중점 산업으로 선정할 바 있다.

이에 충칭시는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2개의 수소산업 클러스

터를 선정해 관련 기반시설을 구축 중이며, 수소충전소 증설과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모종혁 통신원은 "충칭시 주룽포구의 '서부수소밸리' (수소연료전지를 전문적으로 개발·생산하는 산업클러스터)는 2만㎡ 부지에 200억위안을 투자해 건설 중인데 독일의 다국적 기업인 보쉬를 비롯해 국내외 10여개 업체를

이미 유치했다"며 "충칭시는 서부수소밸리에 2025년까지 관련 기업 30개사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칭시는 작년 7월 량장신구에 문을 연 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현재 3기를 운영 중이며, 올해 이를 2배 이상 확충할 예정"이라며 "량장에 위치한 자동차 제조사 창안자동차는 수소연료전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양산 허가를 받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 델리 NCT 정부는 전기자동차 확산과 충전 인프라 증설에 착수했다. 델리 NCT 정부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이륜차, 상용차, 버스 등을 전기이동수단 지원 우선 대상으로 정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전기 승용차 점유율을 2030년까지 3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방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아직 1% 수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델리 NCT 정부는 보조금 규모의 한계로 구매비 보조 정책의 효과가 미미

하자 전기차 시장 확대 정책 방향을 충전소 설치와 같은 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전환했다. 올 상반기까지 지역 내에 전기 충전소 50곳, 충전시설 500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내 상용 전기차를 보유한 소규모, 사무실, 학교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 충전시설 설치 전반을 지원키로 했다.

개별사업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충전시설 설치 지원서를 제출하면 수일 내로 원하는 날짜에 기기 구축을 지원한다. 주차 공간과 충전시설 설치 공간을 확보한 사업자는 정부 보조금 6000루피를 제외한 개별 납부금 2500루피를 내면 기기 설치가 가능하다.

박원빈 통신원은 "델리 NCT 정부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충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차량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전기차 보급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사업자를 대상으로 충전시설 구축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설치 절차를 지원해 대규모 차량 보유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 이용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지난해 서울 하늘, 관측 이래 가장 맑았다 '시장 발언중지·퇴장' 조례에 서울시 강력 반발

초미세먼지 농도 최저치

서울시는 지난해 관내 초미세먼지(PM-2.5)의 연평균 농도는 19.8µg/m³로,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관측을 시작한 2008년 26µg/m³ 대비 약 23% 감소한 19.8µg/m³로 나타났다. 전년 연평균 농도인 21µg/m³와 비교하면 1.2µg/m³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3월에는 비상저감조치가 3회 발령됐고 황사로 인해

대기질이 좋지 않았던 때도 있었으나, 하반기 들어 지속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졌다고 시는 분석했다. 특히 작년 9월은 7µg/m³로 측정돼 관측 이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달로 조사됐다.

초미세먼지 ' 좋음'(0~15µg/m³)인 날도 역대 가장 많은 172일을 기록했다. 반면 '나쁨'(36~75µg/m³) 단계를 넘어선 일수는 역대 가장 적은 35일이었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시의회, 시장 발언제한 조례안 의결  
서울시 "폭거에 지나지 않아" 비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장이 허가없이 시의회에서 발언을 하면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조례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서울시가 "힘을 과시하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며 일침을 놨다.

서울시는 2일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서울시의회에서 시장 발언 제한·퇴장·사과 조례를 의결한 것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간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폭거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시의회 전체 110석의 90%인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임시회에서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이를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퇴장당한 시장은 사과를 한 후에만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9월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시의원들이 답변 기회를 주지 않자 항의하며

퇴장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시는 "의회는 본연의 임무로써 시민을 대표해 조례 제정 및 개폐, 예산 확정·결산 승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며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시장이 발언할 자유까지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도 시민에 의해 선출된 엄연한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라며 "서울시의회가 이를 부정하고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7 | 해질 / 17:26

1월 3일 (月) 음력 : 12월 1일

수도권 날씨 -8 ~ -1°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기온: 연천 -13/1, 동두천 -11/1, 가평 -12/1, 파주 -13/1, 서울 -8/1, 양평 -10/1, 인천 -7/2, 수원 -7/2, 용인 -7/2, 평택 -11/2, 백령도 -2/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지자체 최초 '실내형 공개공간' 제도 도입

서울시 건축시 '공개공지' 설치

서울시는 날씨와 계절, 미세먼지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형 공개공간' 제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주는 용적률을 완화받는 대신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적공간인 '공개공지'

를 설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공개공지는 건물 밖 야외에 공원이나 쉼터 형태로 조성돼 왔다.

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극심한 미세먼지로 실외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날이 많아지면서 실외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낮아짐에 따라 '실내형 공개공간'의 정의와 설치기준(건물 면적에 따른 최소 면적, 높이, 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실내형 공개공간' 도입 사례(미국 뉴욕 맨해튼 IBM 플라자). /서울시

를 개정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 뉴스타파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재명, NFT로 선거자금 모금... MZ세대 어필 전략  
▲ 윤석열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국민복지 꿈꿔야" /사진 뉴시스

▲ 심상정 "아동청소년부 설치해 청소년 인권 제대로 챙기겠다"  
▲ 민주,尹 "큰질"에 "버선발 짚싸" 막말·마이웨이 반성부터



▲ 국힘, '최전방 철책 월북'에 "안이한 안보의식이 불러온 고질병"  
▲ 지상파 3사 여론조사... 이재명, 윤석열에 8.9%~12%p 앞서 /사진 뉴시스